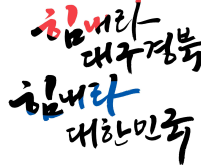
 산업통상자원부		<h1>보도자료</h1>		
<a href="http://www.motie.go.kr">http://www.motie.go.kr</a>				
2020년 3월 1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 10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	
배포일시	2020. 3. 10.(화)	담당부서	국내복귀기업지원팀	
담당과장	우성훈 팀장(044-203-4068)	담당자	김예은 사무관(044-203-4069)	

## “개정 유턴법, 3.11일 부터 시행”

-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,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지원 강화
- 세제감면·협력형모델 신설 등 코로나19 수출대책 후속조치로 유턴 유치 본격화

### [개정 유턴법 시행]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지난해 말 개정된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유턴법)」을 ‘20.3.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동법은 ‘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·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.
-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(업종추가)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·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.
    - 지식서비스산업·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,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에 선정·지원될 수 있다.
    - \* 제조업은 공장 신·증설을 기준으로 국내사업장 신·증설 판단
  - ② (국·공유지 사용특례)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·공유재산 장기임대(50년), 임대료 감면, 수익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.

- 이에, 유턴기업은 국·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%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, 최대 50%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.
- 또한 매입한 국·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(최대 1년)하거나 분할 납부(최대 20년) 할 수 있다.

③ (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) 한편,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 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,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\*하여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.

\* 위원장 : 통상교섭본부장 → 산업부 장관 / 위원 :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→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

④ (지원체계) 마지막으로,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 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.

#### <유턴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>

구분	법률	시행령
업종확대	·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지원대상에 추가	· 지식서비스업·정보통신업 사업장 신·증설 판단 기준 신설
국·공유지 사용특례	·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신설	· 임대료 및 감면 기준 규정 신설 (임대료 재산가액 1% 이상, 최대 50% 감면 가능)
	· 국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규정 신설	· 매입 및 매각 기준 신설(대금 분할납부 가능, 최대 20년 등)
위원회	· 근거 규정 신설	· 위원장 및 위원 직위 변경 등
지원체계	· 원스톱지원 근거 신설	-

## [코로나19 계기 유턴지원확대]

□ 한편, 산업부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,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\*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하였다.

\* 코로나19 수출대책(총리주재,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2.20)

## <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 >

- 우선 중설 유턴기업에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\*하고(3월, 조특법 개정 예정),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-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.

\* 기존에는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유턴 기업에만 법인세 감면

- 또한,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'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' 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'산업기술 R&D 사업'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한다(3월, 지침 개정 예정).

- 아울러, 現 동반유턴\* 개념을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하고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 및 패키지 지원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할 계획이다.

\* 現 동반유턴은 동종·유사 업종이 동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에만 인정

### < 패키지 지원 (예시) >

현 행		신설 추가지원 (예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지역투자보조금</li> <li>▸ 고용창출장려금</li> <li>▸ 구조조정컨설팅 등</li> </ul>	+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고용보조금 (추가 지원)</li> <li>▸ 지역투자보조금 한도 확대</li> <li>▸ 스마트공장·자동화설비 지원</li> <li>▸ 마케팅·인력양성·컨설팅 지원</li> </ul>

□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면서,

-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
-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\*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.

\* 국내 광역 지자체에 지사를 두고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정착 업무 지원(KOTRA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국내복귀기업지원팀 김예은 사무관(☎ 044-203-40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유턴법 개정사항 요약

개정 구분	개정 내용
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 (추가)	대상 업종 확대 제조업→ 제조업, 정보통신업, 지식서비스산업
국·공유재산 사용특례 (신설)	국·공유지 수의계약 및 장기임대(50년) 특례 임대료 산정 및 감면 특례
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(신설)	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근거
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기능 (추가)	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기관 이송 등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 기능 확대

## □ 시행령 개정사항 요약

개정 구분	개정 항목	개정 내용
제조업 외 국내복귀 판단기준	제조업 외 업종 국내사업장 신·증설 기준 (신설)	제조업-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공장 신·증설 지식서비스·정보통신업 - 사업장 면적 또는 생산설비 증가
국·공유재산의 임대	적용대상지역, 임대료 산정 비율, 감면율 (신설)	대상지역 - 수도권 제외 임대료 산정비율 - 재산가액 1% 이상 감면율 - 최대 50%
국·공유재산의 매입	적용대상지역, 분할납부 방법 (신설)	대상지역 - 수도권 제외 분할납부 방법 ① 국가 소유 토지 등 1년 범위에서 납부기일 연기 가능, 20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 ② 지자체 소유 토지 등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

자금지원	국내복귀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 대상 (추가)	'토지매입비용' → '토지·공장의 매입·임차비용'으로 확대
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	위원장 및 위원 직위 (변경),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(신설)	<b>①</b> 위원장 : 통상교섭본부장 → 산업부 장관 <b>②</b> 위원 :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→ 차관 등 부기관장 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사유 신설
시행계획	시행계획의 수립·통보 기한 (신설)	차년도 시행계획 수립·통보 산업부 → 관계 중앙행정기관 (매년 11월 30일) 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중앙행정기관 → 산업부 (추진 차년도 1월 31일)

## □ 시행규칙 개정사항 요약 ※ 3.12. 관보 게재 예정

개정 항목	개정 내용
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(축소)	<p>[축소 서류]</p> <p>1) 해외사업장 시설 관련 서류</p> <p>2)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등본</p> <p>3) 재무제표 제출대상연도 축소 등</p>
유턴법 제13조의5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국·공유재산 매각 해지 유예 기간 (신설)	<p><b>①</b>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: 50일 이내</p> <p><b>②</b> 수의계약 후 계약서 상의 사업착수예정일 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: 1년 이내</p>